

'예산 유용·일감 몰아주기' 광주의원 고발

참여자치21, 의원 7명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

기념품 사적유용에 수의계약 청탁·영업 행위

광주 시민단체가 비위 의혹이 불거진 지역 기초의원 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참여자치21은 오는 28일 예산 유용·광주 서구·북구의회 소속 의원 7명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구의회 강기석 의원은 전반기의 장으로 재임 중이던 올해 상반기에만 의회 기념품 예산 1000만 원 중 600만 원으로 구입한 넥타이 200개 중 166개를 쟁겼다.

의회사무국이 남은 홍보비로 구입한 다기 세트 100개(단가 2만6500원) 중 60개도 가져가 공무원·지역민들에게 선심성 선물로 썼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의원의 비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나, 유용 규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참여자치21은 강 의원을 둘러싼 의

장단 법안카드비 유용, 의회사무국 카드비 대납 등 또다른 의혹도 이번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구의원 6명은 불법 수의계약, 겸직 신고 규정 위반, 선배 운영 업체 영업 활동 등 비위와 관련해 고발 조치됐다.

이정철 의원은 당선 이후에도 공공 시설물 제작 업체 대표직을 상당 기간 겸직했으며, 이후에도 대표직을 아내·아들·제3자에게 넘겨줘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의원이 대표로 재직했던 업체는 최근 북구청이 발주한 관련 공사를 도맡아 진행한 A업체에 공사 자재 등을 납품,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자치21은 광주 기초지자체의 발주 사업을 경기 지역에 위치한 A업체가 수주한 것이 이례적인만큼, 이 의원의 영향력 행사 여부가 수사 대상



참여자치21 등 광주 지역 10개 시민단체·기관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원들의 일탈·비위에 대한 책임있는 징계와 제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될 것으로 본다 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은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의혹은 경쟁 업체의 음해성 주장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대서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체 2곳이 북구청으로부터 각 2건과 8건씩 수의 계약(총 9170만 원 규모)을 따낼 수 있게 직·간접적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중 1곳은 기 의원이 2015년 8월 설립,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곳이며, 다른 1곳도 기 의원과 연관이 있다.

기 의원은 "동료였던 두 업체 관계자들의 부탁을 받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게 구청에 청탁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백순선 의원은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여만 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8건은 백 의원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발주했다.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기동취재본부

연락금지 명령에도 전 여친에 공포 문자폭탄 50대 벌금

연락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물품 거래 앱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광주에서 중고물품 거래 앱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 전 여자친구 B(48)씨에게 49차례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간접 강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물품 거래 앱에 올렸고, 이를 본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OO'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B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는 자신과 B씨만 의미를 알 수 있는 문자를 수십 차례 보냈다. 문자에는 둘 사이의 갈등 관련 내용 또는 개인적 사정이 담겼다. 특히 A씨는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도 문자를 보냈다. B씨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는 결별 이후 문자를 보내는 시점까지 B씨와 수차례의 고소·고발과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했다. 주로 심야 또는 새벽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든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등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B씨에게 공포와 불안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아동에 '신체 촬영해 전송하라'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아동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스마트폰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B양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 통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나이를 속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찾아가겠다며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 성적 학대 행위에 이어 유포 협박까지 했다. 발령 수법과 피해자 연령 등으로 미뤄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자전거 사고로 실명?' 보험사기 70대 항소 기각

장애를 숨기고 자전거 사고로 실명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분쇄기 날에 안구를 맞는 산업재해 사고로 후유증을 앓다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다.

장애 1급 판정으로 장애 급여 4600여 만 원도 지급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 가입 일주일 만인 2017년 4월 3일 전남 한 지역에서 자전거를 끌다 넘어져 손잡이에 눈 부위를 맞아 시력을 잃었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1750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교육청 vs 학비노' 급식 조리원 감원 놓고 대립

학생수 감소 내년 조리원 12명 감원 방침



학교 급식실 조리원 감원 문제를 놓고 광주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학비노)가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학비노는 조리원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면 감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비노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은 단설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 포함 1235명이다. 이 중 37명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퇴직 조리원 수만큼 이 아닌 25명만 신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실상 내년도 정원 이 12명 줄어드는 셈이다. 매년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

는 데 따른 교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도 1400명이 넘는 학생(급식인원 기준)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학비노 측은 조리원 현원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평소에도 업무가 과중한데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학년별 시차배식과 철저한 방역 상황에 따른 업무량 및 근무시간 증가, 휴게 시간 부족 등 코로나19가 업무량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조리원 수까지 줄이면 급식실 내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줄어드는 학생 수 때문에 교원 정원도 매년 수십명씩 감원하는 실정이다. 2021학년도 학교 상황 전반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추석 이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순천시선거관리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선거관리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말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방지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